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향하여

최근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여러 차례의 해명과 아울러 정부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되고 있어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건강보험의 역사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역사는 크게 네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이다. 사실상 이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짜여졌고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였고 비영리 공공조직(‘조합’)이 관리를 담당하였고 의료기관에게 행위별수가제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두 번째 시기는 제도

가 시행된 1977년부터 제도의 적용대상인구의 확대에 전력을 쏟던 시기이다.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89년부터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기 까지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이후 관리방식의 논쟁에 매달린 시기였다. 관리방식은 보험자의 바람직한 역할,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 재원조달의 효율과 형평, 관리운영의 효율 등 모든 것과 관련지어 쪼고, 마치 관리방식이 의료보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념적으로도 양분화되는 갈등에 휩싸였다. 네 번째 시기는 진보성향의 정부가 집권하여 통합을 추진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이다. 통합을 완수하였으나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위기에 봉착하였다.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보장성 확대에 노력하였으나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제도는 시대의 요구와 국정이념에 따라 변화

해 왔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려는 목적은 하나이나 건강보장에 대한 가치관과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앞으로 새 정부가 건강보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당사자들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념적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집단으로부터의 반발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요청될 것이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를 이끌어내어야 무리없이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통제하면서도 보장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해야 하고, 관리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관리비용은 절감해야 하는 상호 배치되는 목표들을 조화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제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건강보장 정책에 대해 차분히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비전을 세우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세계에 자랑할만한 선진 건강보장제도를 만들어내는 데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필립**